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 COVID-19 위기 속에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음.
-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48.7%가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였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사회위험에 대응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서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파악이 필요함.

-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고등교육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전통적 젠더 규범의 완화와 돌봄 문제 등 기존의 산업화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위험이 부상하고 있음.
 - 새로운 사회위험의 등장은 고용구조 재편 및 노동시장 정책의 대안적 구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새로운 사회위험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에서는 국민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의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OECD(2019)¹⁾ 국가 데이터와 한국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2020)」

- 분석 대상: 지역과 연령 비례(2020년 7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분포 기준)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한 19-64세 한국인 1,500명(2020.9.1.-11.까지 데이터 수집)
 - OECD(2019). Risks that Matter에서 발표한 OECD 국가별 조사 결과와 한국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함.²⁾

각주

1) OECD(2019). Risks that Matter. OECD: Paris.

2) 류기락 외(2020)의 데이터와 OECD(2019)의 데이터는 조사 시점이 불일치하여 엄격한 비교 분석에 한계가 있으나,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음.

〈표 1〉 표본 특성

성별		연령			전체
남성	여성	19-34세	35-50세	51-64세	
758명(50.5%)	742명(49.5%)	452명(30.1%)	560명(37.3%)	488명(32.5%)	1,500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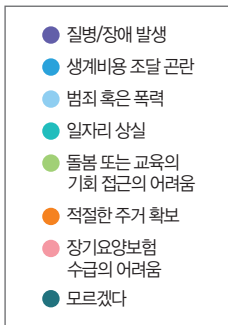


KRIVET 모바일용

02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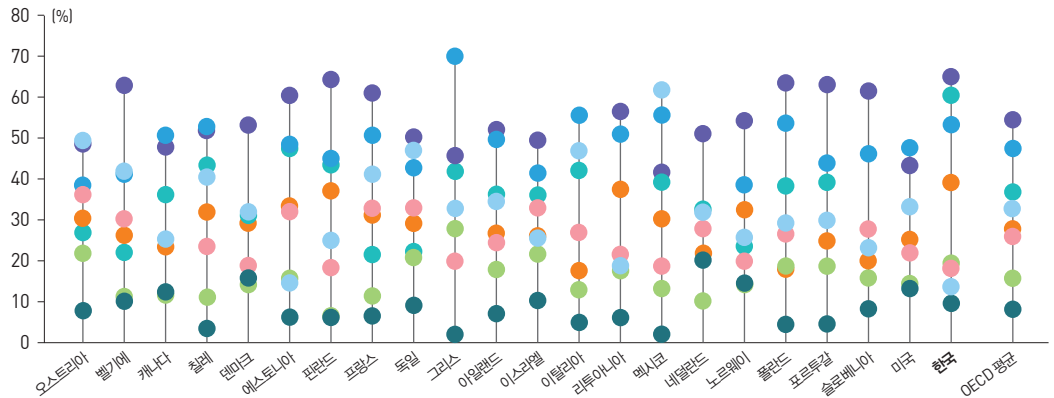
한국은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생계비용 조달 곤란'을 주된 사회위험으로 인식함.

- 한국은 내년 혹은 2년 이내에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큰 사회위험으로 인식함.
 - OECD 국가는 '질병·장애 발생(54.5%)', '생계비용 조달 곤란(47.6%)'이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함.
 - 그 외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적절한 주거 확보', '돌봄 또는 교육 기회 접근의 어려움'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어려움', '범죄 혹은 폭력'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응답함. 특히, 한국은 '범죄 혹은 폭력'이 13.9%로,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음.



주

- 설문 문항: "귀하는 내년 혹은 2년 이내에 귀하와 가족에게 무엇이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별로 우선순위 3개를 선택



[그림 1] 2년 이내 본인과 가족에게 닥칠 가장 큰 위험

03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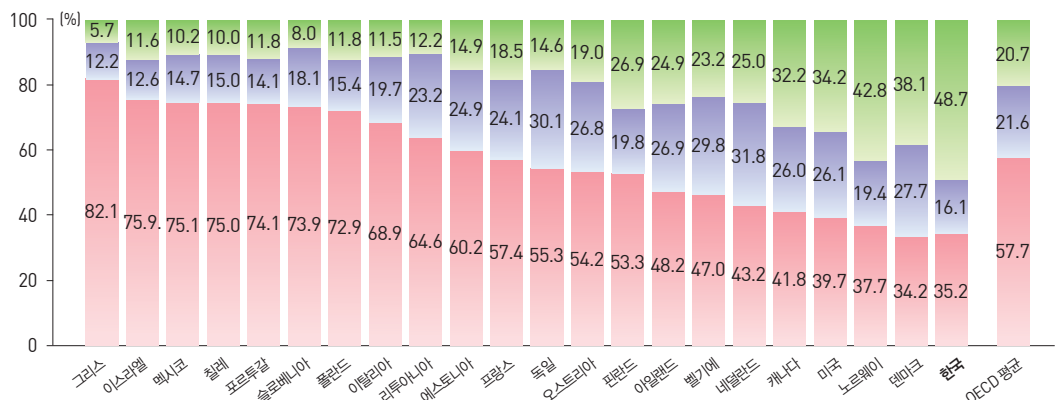
OECD 국가 중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적절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음.

- 한국은 '현재 정부에게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는 나에게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한국 다음으로 노르웨이(42.8%), 덴마크(38.1%), 미국(34.2%), 캐나다(32.2%) 순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20.7%임.
 -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한국이 35.2%로, OECD 국가 중 덴마크(34.2%) 다음으로 낮음.



주

설문 문항: "귀하가 현재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하였을 때 정부는 나에게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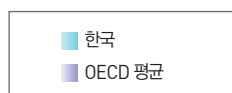
[그림 2] 현재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 및 세금 대비 정부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동의 비율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한국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감당할만한 주거(공영주택, 전월세 임차인 또는 주택 구입지원 지원)'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57.5%).
 - 그 다음으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보장³⁾'임 (54.2%).
 -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보다 나은 국민연금(54.4%)', '보다 나은 건강보험 보장성(48.0%)' 순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각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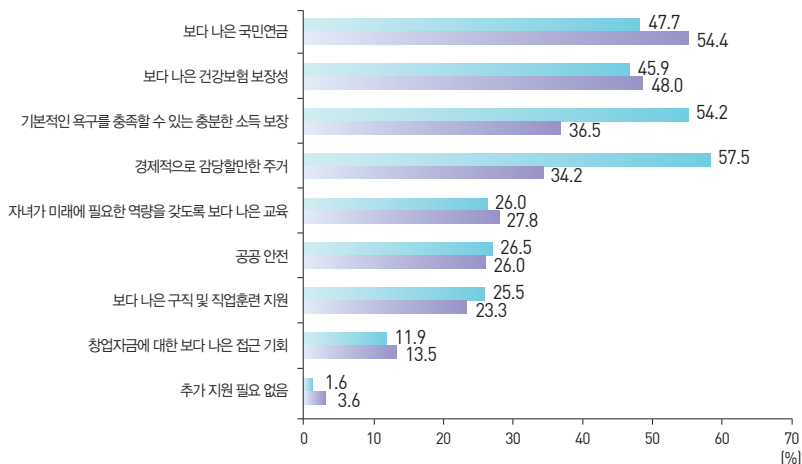
3) 예: 정부의 기본소득 지급



| 주 |

1) 설문 문항: "귀하는 귀하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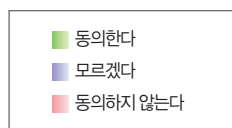
2) 응답자별로 우선순위 3개를 선택



[그림 3] 경제적 안정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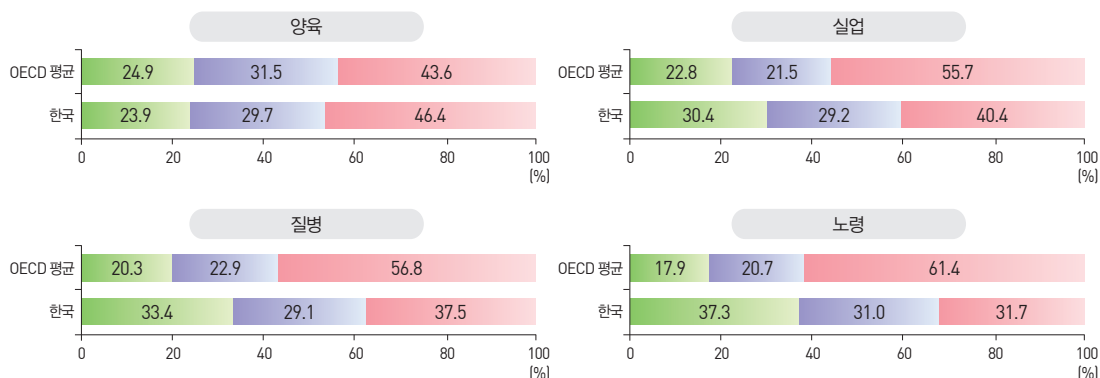
한국은 정부가 '노령', '질병', '실업', '양육' 순으로 충분한 소득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응답함.

- 한국의 경우,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노령(37.3%), 질병(33.4%), 실업(30.4%), 양육(23.9%) 순으로 정부가 지원 해 줄 것이라고 응답함.
 - OECD 평균은 양육(24.9%), 실업(22.8%), 질병(20.3%), 노령(17.9%) 순으로 나타남.



| 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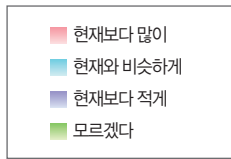
설문 문항: "귀하가 다음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 정부가 귀하와 귀하의 가족에게 충분한 소득을 지원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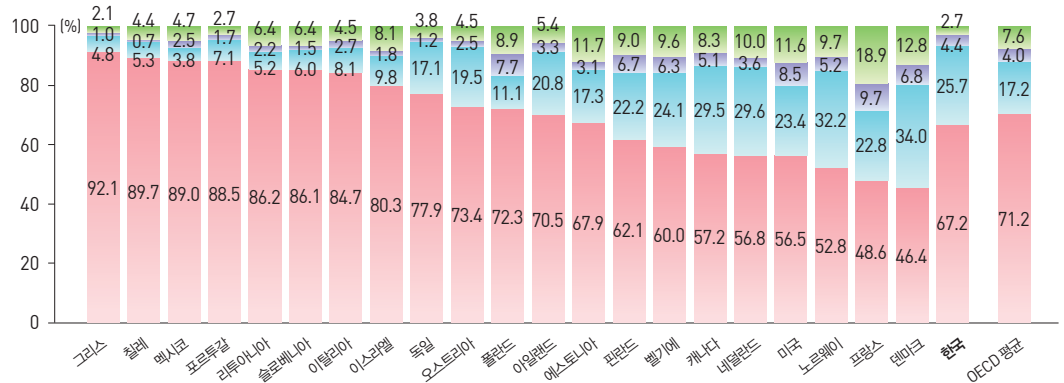
[그림 4] 소득 상실 사유별 정부의 소득 지원 예상 여부

한국은 '경제·사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음.

- 한국은 '국민의 경제·사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67.2%), OECD 국가 평균 비율(71.2%)보다 낮음.
 - OECD 국가 중 경제·사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리스 (92.1%)가 가장 높고, 정부의 역할이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는 응답은 덴마크(34.0%)가 가장 높음.



[주]
 설문 문항: “귀하는 정부가 귀하의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하여 현재보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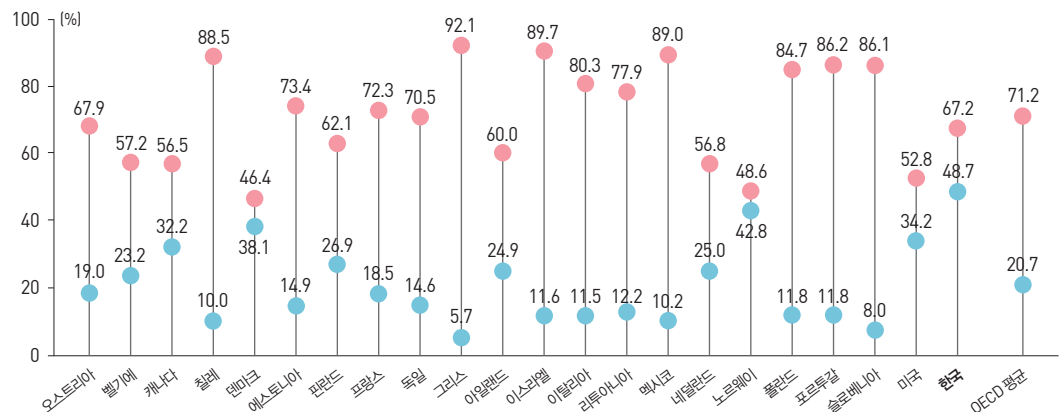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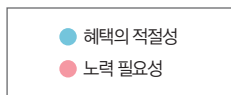


[그림 5] 경제·사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 요구 수준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경제·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음.

[각주]
 4) 예) 정부의 혜택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 정부의 노력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음($r = -.839$)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적절성 대비 경제·사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가 반비례⁴⁾함.
- 그러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적절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67.2%가 경제·사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6]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적절성과 사회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노력 정도

04 시사점

- 우리나라 성인은 조세와 사회보장료 부담에 견주어 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평균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COVID-19 대유행으로 주거,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며, 정부 지원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OECD 국가에 비해 ‘적절한 주거 확보’, ‘돌봄 또는 교육 기회 접근의 어려움’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본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김 윤 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류 기 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